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목욕장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 ○○. ○○. 피청구인에게 인천 ○○구 ○○로 ○○○, ○○동 지하 ○, ○호(○○동, ○○○아파트) 소재 ○○○불가마사우나(이하 ‘이 사건 목욕장’이라 한다)에 대한 승계를 받기 위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이하 ‘이 사건 지위승계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양도양수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서’라 한다)를 첨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 ○○. ○○. 청구인에게 양도인에 대한 기재사항을 20○○. ○○. ○○.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 ○○. ○○. “해당 기간 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으며, 귀하께 지위승계 신고서의 구비서류 보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위승계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목욕장의 소유자 겸 최초 시설자인 ‘○○○’으로부터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되어야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목욕장 영업의 물적 설비인 건물에 대한 사용권한도 없이 ○○○의 영업권을 방해하기 위하여 이름만 올려져 있는 마지막 영업자로 신고된 ‘△△△’ 으로부터 영업의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없이는 영업자 지위승계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신고행위는 공중위생법 제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양도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위한 필수적 기재사항과 그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 갖추지 못한 신고라고 할 것이고,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의 양도양수서상의 양도인의 기재를 누락한 서류는 영업신고서상의 양도인의 기재와도 일치하지 않는 서류이므로 이러한 형식적 기재사항을 보완하라는 피신청인의 보완요구는 적법한 것이다.

나. 결국 청구인 스스로 직전영업자인 △△△을 승계하는 사람으로 기재하고 승계받는 사람을 청구인 자신으로 기재하여 영업자지위승계를 신고한 이상, 영업신고서상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영업양도양수를 증명한 서류로서 기재출한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양도양수서는 승계하는 사람의 성명과 서명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는 이상, 승계하는 사람인 △△△과 청구인간의 영업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라는 피청구인의 적법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영업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누락한 흠결을 사유로 한 20○○. ○○. ○○.자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양도양수서를 첨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인에 대한 기재사항을 20〇〇. 〇〇. 〇〇.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완요구 사항]
○ 기재사항 보완
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상 양도인 자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입 및 서명
2.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제출 누락으로 뒷면 작성 및 제출
3. 양도양수서상 양도인 자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입 및 서명
※ 양도인 내방 못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앞·뒤 한 장에 복사 후 자필서명,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에 도장 날인. 끝.

다.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해당 기간 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으며, 귀하게 지위승계 신고서의 구비서류 보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지위승계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는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는 ‘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20〇〇. 〇〇. 〇〇. 이 사건 지위승계신고를 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제출하면서 “승계를 하는 사람”에 ‘△△△’만을 기재하였을 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같은 날 첨부하여 제출한 이 사건 양도양수서에는 “양도인”란에 아무것도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목욕장에 대한 신고관리대장에는 이 사건 목욕장은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영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고,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에 의하면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를 하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3) 위 인정사실 및 규정내용에 비추어 살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지위승계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 양도인에 ‘△△△’ 외에는 아무런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목욕장의 양도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으며, 귀하께 지위승계 신고서의 구비서류 보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